



주간통일정세 2009-46(2009.11.09 ~11.1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46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北김정일, 어슬렁어슬렁 걷는 골프, 싫어(11/10, 우리민족끼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9월 평양시 교외 골프장에 나갔다가 “골프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신사풍’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대인기고 유행”이라는 한 간부의 말에 “골프는 내 성미에 맞을 것 같지 않다.”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0일 김 위원장을 이상화한 ‘골프와 위인의 정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언
- 김 위원장은 자신은 “1만보를 걷는 속도운동을 한다”며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것은 성이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 그는 또 “운동을 하여도 활력있는 것을 좋아하고 맥빠지고 박력이 없는 운동을 싫어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소개
- 매체는 그가 “안온하고 조용하며 목가적인 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들끓고 혁명적 열정이 넘쳐나는 생활을 좋아한다”며 이 때문에 “비관과 애수, 고독, 침울과 같은 정서들은 더 말할 것 없고 기백이 없고 때없이 고요를 부르는 안온하고 조용한 정서”는 김 위원장의 정서와는 인연이 없다고 주장, 그는 또 “사업에서 오물조물하며 열정이 없는 기풍”과 “생활에서 희열이 없이 무미건조한 현상을 몹시 타매”한다고 매체는 소개

#### ● 김정일 매우 건강, 정은 후계는 소문(11/9, 연합)

- 중국 공군 60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리중진(李中進) 조선인민군 공군 외사국장은 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관련, “매우 건강하다. 항상 적확(的確)하게 지도해 주고, 시찰도 매우 많이 나온다”고 설명
- 리 국장은 이날 산둥(山東)성 지닝(濟寧)시에서 일부 일본 언론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전언, 그는 또 “(김 위원장이)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군부에 대해서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
- 리 국장은 3남 김정은 씨로의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소문일 뿐이다”라고 답변

#### ● 김정일 특급열차 전용역 19곳 있다(11/9,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내 현지도나 외국 방문 때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전용열차가 6개 세트 90여대(량)에 달하며, 약 20개소에 전용



역을 운용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 테러에 대비해 김정일의 전용열차가 달리는 앞뒤에는 사전 정찰 및 경호를 위한 2개의 열차편이 별도로 운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 한·미 정보당국은 미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등 각종 정찰장비와, 탈북자 증언 등 인간정보를 종합해 김정일 전용열차 추적 및 분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짐. 그 결과 김정일 전용열차의 전용역(일명 1호역)은 평양 용성1호역과 강대동 1호역을 비롯, 원산, 신의주, 혜산 등이며, 전용역은 보통 김정일의 전용별장 격인 특각에서 수km~30km 이내 지역에 설치돼 있음.
- 김정일이 전용열차로 이동할 때는 보통 3개의 열차가 함께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김정일이 탄 열차 앞에 경호 및 행사요원이 탄 선행(先行)열차가 이동하면서 선로가 안전한지 등을 점검, 또 김정일 열차를 가운데 두고 경호병력과 지원요원이 탑승한 열차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뒤따른다는 것 전용열차는 보통 시속 60km 이내의 빠르지 않은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이 도착할 역에는 폭발물 등 각종 테러에 대비해 경호 및 비밀요원 100여명이 미리 도착해 철저히 점검한다. 또 전용열차가 역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선의 전기를 아예 끊어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가 열차가 통과한 뒤에야 다시 전기를 넣어 재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2004년 4월 평안북도 용천군 용천역 대형폭발사고 이후 전용열차 운행 때 경호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언, 김정일이 탄 열차는 방탄(防彈) 설비가 돼있고 회의실, 접견실, 침실 등이 구비돼 있다. 위성전화 등 첨단 통신장비와 벽걸이 TV 등이 비치돼 주요 사안에 대해 즉각 보고받고 지시할 수 있도록 돼있음.
- 김정일이 열차에서 내려 별장으로 이동할 때는 전용열차에 신고 간 벤츠 등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소식통은 전언, 김정일이 전용열차편으로 국내 현지도도를 할 때는 북한 공군의 IL-76 수송기, MI-17헬기 등이 경호지원 인력 및 장비를 인근 비행장까지 실어나르기도 함.

#### 나. 정치 관련

##### ● 통일신보, 선의엔 선의로, 도발엔 무자비한 보복(11/14,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1월 10일의 서해교전이 “북남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때”에 남한 “군부 호전세력”에 의해 일어났으며 “선의에는 선의로, 도발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답하는 것”이 북한군의 “일관된 자세”라고 주장
- 신문은 14일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전과 관련해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보도’를 발표하고 남측당국에 “사죄”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보도

- 신문은 특히 “두차례의 엄중한 무장충돌사건”을 불러온 “서해해상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곳”이어서 “이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군사행동은 금물이며 더욱이 선불질은 무장충돌과 지어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남측이 귀대하는 북한 해군 경비정을 향해 함포를 쏘았다고 비난

● 北, 서해교전 南발포 경위 스스로도 엇갈린 주장(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최근 남북 해군간 서해교전과 관련,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호전세력들의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대담’ 형식을 빌려 이번 교전의 배경과 경위 등에 대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의 입장을 선전
-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선방송위원회 기자들’은 “최근 남조선 호전세력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 “고의적인 긴장격화 책동”을 벌였다고 북한 군부와 언론매체들의 대남 비난을 되풀이, 이들은 북한 해군경비정이 북한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남조선군 함선집단이 경고사격이라는 것을 다섯번이나 하는 이런 용납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했고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북한 경비정이 “즉시 자위적인 대응타격을 가하자” 남한 해군함들이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나면서 불질을 했다”고 주장
- 그러나 대담자들이 “달아나면서 불질을 했다”고 말한 대목은 지난 10일 교전 직후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내놓은 ‘보도’에서 남한 해군함들이 귀대하고 있던 북한 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했다고 주장한 것과 다른것임. 또한 북한측 주장들은 다만 북한 경비정의 피해 상황에 대해선 모두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노동신문, 개방·세계화 두려움과 거부감 재확인(11/1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150일 전투’ 성과를 돌아보던 자리에서 “조선(북한)은 세계어로! 세계는 조선을 쳐다보라!”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조선은 세계어로 나간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전언
- 신문은 그러나 여기서 세계란 나라들이 모인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다”며 “‘세계화’의 바람속에 줏대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세계어로’나 제정신없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큰집’이 기울어지면 자기의 삶과 앞날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계속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설계하고 마중해 나가는 우리식의 내일”이라고 주장해 김 위원장의 말이 세계화와 개방을 가리키는 뜻이 아님을 강조
- 신문은 ‘세계가 쳐다보는 조선’이란 “영토가 크고 인구가 많고 현란하게 번쩍거리는 것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자기 목표와 이상을 자기 힘, 자기 식으로 실현하며 참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자강의 나라”라고 해설





● **北매체, 서해교전, 南의 계획도발, 대가 치를 것(11/12, 노동신문; 민주조선)**

- 노동신문은 12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최근 서해교전에 대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인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리는 남조선 군부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라며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북한 해군경비정이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중이었는데 남측이 “먼저 불질을 했다”고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내용을 되풀이 보도
- 민주조선도 이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계획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때에 남조선 군당국은 서해해상에서 무장도발 사건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우리측에 넘겨씌우는 방법으로” 미국에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어 대조선 적대시 정책도 바꾸지 말고 조미(북미)대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간청하려고 했다”고 주장, 민주조선은 또 지난달 동부전선 철책선을 뚫은 월북 사건으로 여론의 비판에 “수세에 빠진 남조선 군당국”이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여론을 내돌려 땅바닥에 떨어진 체면을 치켜세워 보려고 했다”고도 주장

● **北원동연, 통전부 부부장 승진(11/12, 연합)**

- 북한의 대남 기관인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과장(국장격)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실장이었던 원동연(62)이 최근 통전부 부부장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고 북수의 대북 소식통이 12일 전언,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달 방북했을 때 원 실장의 10월 승진 사실을 통전부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언급
- 다른 소식통은 “원 실장이 이미 지난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특사 조의방문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오기 직전 통전부 부부장으로 승진했었다는 것을 10월초 북한 관리들로부터 들었다”며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승진도 같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
- 그는 “통전부 부부장은 대남 대화와 교류를 총괄하는 자리로 원동연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최승철 전 부부장의 자리를 이은 것”이라고 언급
- 통일부 당국자는 “특사 조의방문단 일원으로 왔을 때 원동연의 직함은 아태위원회 실장이었고, 그 이후 남북협의 과정에서건 북한 매체에서건 공식직함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여부는 앞으로 남북회담 등에서 확인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
- 원동연은 지난 20여년간 남북간 주요 고위급 회담과 접촉에 빠짐없이 관여해온, 대남분야 베테랑임.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겸한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할 정도로 이론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으며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 때 수행원으로 1차부터 7차 회담까지 참가했고 1992년 고위급회담 때는 군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나섰으며, 1995년 7월 베이징 2차 쌀회담 때는 북측 대표를, 같은 해 9월 3차 쌀회담에서는 대변인을 맡았음. 그는 또 2002년 10월 북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 시찰단의 실무 현안을 책임지는 현장 조정자 역할을 했으며 조평통 서기국 부장 등 여러 직책을 갖고 있음.

### ● 노동신문, 남북 화해·화합, 관계개선 전제(11/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화해와 협력은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화해와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필수적 전제”라고 주장
- 신문은 “화합이란 서로의 사이가 화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화해란 좋지 않던 관계를 서로 이해하여 푸는 것을 말한다”며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면 민족의 힘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하게 마련되게 된다”면서 이같이 설명
- 노동신문은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반목과 불화는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낳는 사상적 근원이고 서로의 화합을 가로막고 민족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되고 있다”면서 “동족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대결의 감정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화해를 도모할 수 없으며 긴장격화와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

### ● 北매체, 옥수수 1만t 지원, 속통좁은 처사(11/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우리 정부가 대북 옥수수 1만t 지원 의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남한 내에서 이를 “비난 조소하는 여론이 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속통좁은 처사”라고 비난
- 우리 정부의 대북 옥수수 1만t 지원통보에 북한 당국은 2주 넘게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매체는 ‘응당한 못매’라는 ‘단평’을 통해 “빈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고…무엇을 크게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지만 고작해서 농부의 지게에 올려놔도 시원찮을 강냉이 얼마 타령”이라면서 “치사하고 속통좁은 처사”라고 비난

### ● 민주조선, 美 국방예산 채택 비난(11/1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0일 미국이 최근 6천800억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채택한 데 대해 “세계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 신문은 이날 ‘군비경쟁을 몰아오는 부당한 처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심한 재정적 난관에 직면”한 미국이 “국방예산에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또다시 퍼부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본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신문은 국방예산의 일부는 국가안보계획에, 일부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원에 각각 이용되며 상당액은 “전지구적인 미사일 방위체계 창설”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에 대해 “세계적 규모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간부, ‘개판된 남조선국회’ 시청(11/10, 조선일보)

- 북한당국이 10월 초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판된 남조선국회’라는 제목의 남한 비방 영상물을 최고위 간부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9일 알려짐.
- 북한내 한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영상물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해머와 전기톱으로 국회시설을 부수고 발차기를 하는 장면 등 ‘폭력 국회’ 현장을 보여주는 여러 동영상을 한 시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었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역도가 못살게 굴어 자살했다”, “남조선은 혼란 그 자체”, “남조선 인민들은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전언
- 중앙기관 국장급 이상만 참가할 수 있는 인민문화궁전 강연회는 특별 영상물을 통해 국제사회나 남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함. 이날 영상물은 북한 최고위 간부 약 300명이 2개조로 나뉘어 본 것으로 알려짐. 1조는 노동당 중앙위와 국가보위부, 군부 소속이었고, 2조는 내각 등의 간부들이었음.
-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 북한주민은 이 영상물을 본 간부들이 “남조선 국회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지나치게 자유가 넘치는 것도 문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언

다. 경제 관련

● 노동신문, 개도국 ‘독자’금융체계에 관심 표명(1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독자적인 금융체계를 창설”해 “서방이 주도하는 불공평한 국제금융체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발전도상국들의 움직임에 주목, 노동신문은 이날 ‘독자적인 금융체계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국제금융체계를 개도국에 대한 “위협과 압력, 경제적 예측과 수탈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 신문은 10월 열린 중남미좌파 모임인 ‘미주(美洲)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정상회담이 내년부터 회원국간 무역거래에 공동통화인 ‘수크레(Sucre)’를 사용키로 합의한 사실을 이에 대한 대응사례로 소개



- **北피복·기계회사들, 和기업 주문 생산중(11/13, 조선신보)**
  -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 사이에 교류협력 계획들이 합의돼 실행 단계라고 조선신보가 13일 보도
  - 신문은 “조선(북)과 네덜란드의 기업들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선상업회의소가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 신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기업가 대표단은 당시 “희망하는 무역 분야에 대한 안”을 갖고 방북했으며, 특히 정보 기술(IT) 분야와 주물단조품 제작, 피복 주문생산 등에 관심을 보임.
  - 이 대표단은 방북 기간 평양에서 열린 제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를 돌아보고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 은하피복회사 등 조선상업회의소 회원사들과 실무면담을 가졌으며, 현재 북한의 피복 회사들과 기계무역 회사들은 네덜란드 기업들과 합의에 따른 주문생산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 네덜란드 대표단은 귀국 후 북한의 대외경제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기업들에 배포될 예정임.
  
- **프랑스 NGO, 北에 토끼 200마리 전달(11/10,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미에 위장스’가 오는 주말께 중국산 토끼 200마리를 북한의 7개 협동농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언, 토끼가 전해지는 농장은 평양의 룡성, 황해북도의 연탄, 삼훈, 미곡, 평안북도의 청중, 광산, 소주 등 7곳임.
  - 단체측은 “당초 지난 9월까지 북한에 중국산 토끼를 들여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과 북한 간 ‘외교적인 문제’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말했다지만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 단체측은 “내년 말까지 북한에 토끼의 번식능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사육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해 북한의 토끼 생산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토끼 사육사를 연수차 중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 이 단체는 이미 네덜란드인 1명, 프랑스인 1명 등 3명의 직원을 평양에 파견했으며 북한 현지주민 7명을 기술직, 사무직 등에 채용한 상태라고 밝힘.
  - 프리미에 위장스는 토끼 지원 사업 외에도 북한 평안남도 평성, 남포와 황해북도 토산군 등 3개 지역에서 병원 재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RFA는 전언

#### 라. 군사 관련

- **北, 서해 NLL 안통해… 무자비한 군사조치 취할 것(11/14, 조선일보)**
  -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김영철 중장)은 13일 우리측 단장(류제승 소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북)가





설정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

- 북측은 또 “남측의 북방한계선(NLL)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분별을 가려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은 현재의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내려와 있음. 북측 단장은 이날 “위임에 따라 우리(북한)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은 이번 교전에 대해 “(남측이) ‘경고 사격’이 아닌 조준 사격과 ‘파괴 사격’으로 선(先)불질을 한 것은 노골적인 군사 도발행위”라고 주장

● 北, 北해상분계선 고수 군사조치 취할 것(11/13,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민주조선)

-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은 13일 남측 단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이 있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북측 단장은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사태의 엄중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리 군대의 원칙적 입장”을 통지한다며 이러한 제3항을 포함해 4개항의 입장을 밝혔음.
- 북측은 제2항에서 “남측의 북방한계선 고수 입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고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분별을 가려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 제1항에선 “남측은 이번 사건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하여 민족 앞에 사죄하고 그 주모자들을 동족대결의 광신자, 평화의 파괴자로 즉시 매장해버리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제4항에서 “남측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북측 단장은 남측에 이러한 입장의 통지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서해무장 도발 사건을 두고 남측이 흑백을 전도하는 꾀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통지문이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임을 시사
- 통지문은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려고 부질없는 군사적 모험에 매달리는 것은 파렴치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 함선의 자위권 행사를 ‘월선’으로 매도하고 불명목표 확인에 나선 우리 함선과 군인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사격’이 아닌 직접 조준사격과 ‘파괴사격’으로 선불질을 한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의도적이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
- 이어 통지문은 “여러척의 함정을 일시에 동원하여 수천발의 총포탄을 쏘아대며 부린 난동은 완화의 움직임은 보이고 있는 조선반도 정



세의 흐름을 제3의 서해교전으로 가로 막아보려는 남측 우익 보수세력들과 군부 호전집단의 계획적인 모략행위”라고 거듭 기종 주장을 되풀이함.

● **北경비정 올해 23회 NLL 침범, 작년比 3배↑(11/11, 연합)**

- 올해 들어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횟수가 23회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음. 군 관계자는 11일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모두 23회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며 “같은 기간 북한 선박(어선)은 25회 NLL을 넘었다”고 밝힘. 이는 작년 한해동안 경비정이 7회, 선박이 11회 NLL을 침범한 것과 비교하면 이미 각각 3배와 2.6배 가 많아진 것임.

● **北, NLL만 차지하면 인민생활이 12% 높아진다(11/11, 데일리NK)**

-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던 북한이 최근 북방한계선(NLL) 주변 군부대들에 “북방한계선 문제가 강성대국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데일리엔케이는 11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남도 해안포부대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강성대국 건설의 열쇠’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면서 “북방한계선만 차지하면 인민생활이 12% 높아진다”는 사상 강연이 이뤄졌다고 보도
- 이 매체는 또 “군관(장교)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북방한계선에 거대한 원유줄기가 있기 때문에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차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NLL을 차지하면 (유전을 개발해)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12% 이상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은 저절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소식통은 소개
- 이러한 북한 군부의 선전은 북한 내부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이 매체와 인터뷰한 소식통은 “이러한 소문이 군인들을 통해 사민(주민)들 속에까지 전해지면서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군인들도 북방한계선을 무조건 찾아야 한다는 각오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언

● **北, 서해교전에 사죄·책임조치 요구(11/10, 연합)**

-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0일 발생한 서해교전과 관련, “남조선 군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측에 사죄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에서 남한 해군이 “우리측 수역에서 엄중한 무장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주장
- 보도는 북한 해군경비정이 자신들의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기동했다가 오전 11시 20분께 “목표를 확인하고 귀대하고 있을 때” 남한 해군함들이 북한 해군경비정을 “뒤따르며



발포하는 등 엄중한 도발행위”를 했다고 주장

- 이어 보도는 북한 해군경비정이 즉시 “불의의 대응타격”을 가했으며 “급해맞은 남조선군 함선집단은 황급히 자기측 수역으로 달아났다”고 말해 교전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대목마다 남한 합참의 설명과 정반대의 주장을 폈음.

#### 마. 사회·문화 관련

##### ● 평양시민들, 영어·중국어 ‘열공’(11월호, 조국)

- 월간 조국 11월호는 ‘의식변화에 따라서는 외국어 강습’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최근 북한 평양에서 외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면서 외국어 강습생이 부쩍 늘었으며 가장 인기있는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라고 보도
- 지난 1982년 외국어 강습을 시작한 인민대학습당은 초기엔 “수요가 높은 몇개 어종에 한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교육했고 강습생 수도 “불과 30~40명 정도”였음. 그러나 최근 “외국어를 배우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종전에 한개 학급 정도에 불과하던 강습생 수가 몇배로 늘어나고 중어나 영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잡지는 전언
- 현재 인민대학습당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등을 강습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외국어는 영어와 중국어이고 그 다음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순이라고 잡지는 설명

##### ● 北잡지, 해커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2009년 3호, 정치법률연구)

- ‘정치법률연구’ 2009년 3호는 해커(hacker)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해커에 의한 위법행위들과 범죄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 사회에서도 컴퓨터가 급속 보급되는 것을 방증. 이 학술지는 ‘해커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견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해커의 본래 뜻은 ‘대단히 멋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법이 교묘하고 기술이 높으며 그에 의거하여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소개
- 학술지는 해커에 대한 개념 규정에서 다른 컴퓨터에 침입해 정보를 열람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해커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크래커를 구분

##### ● 北, 바이러스성 질병 진단·예방약 개발 주장(11/11, 조선중앙방송)

- 북한 의과학원 의학생물학연구소가 최근 “비루스(바이러스)성 질병 예방에 쓰이는 새로운 진단 시약”을 개발해 “전국적인 수요를 보장할 수 있는 진단시약을 생산”하게 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보도
- 연구소는 또 “이미 개발한 어느 한 예방약”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방송은 전하고, “세계적으로 미완



성 문제로 남아있는 같은 질병의 예방에 쓰는 또 다른 새로운 예방 약의 개발”과 “나노기술을 이용한 같은 질병의 종합진단시약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임. 방송은 그러나 이 진단시약과 예방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음.

- 北, ‘80년만의 대흉년’ 흉흉(11/11, 연합;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에서 올해가 ‘80년만의 대흉년’이라는 말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이 ‘오늘의 북한소식’에서 주장
  - 소식지는 “함경북도 주민들이 한숨을 쉬며 하는 ‘80년만의 대흉년’이라는 말을 이제는 평안남도 양덕에서도 들을 수 있다”며 “이 지역도 올해 가뭄 피해가 심해 알곡 수확량이 저조하다”고 전언, 소식지는 “식량이 없어 주민들은 ‘150일 전투’ 기간 내내 죽을 먹으며 버텨왔다”며 “곧이어 ‘100일 전투’가 시작되자, 다들 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거나 약초를 캐며 연명하다 보니 전투 열의가 사라져 일에 의욕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설명
  - 양덕 솔로 유명한 양덕은 이전에 산림조성이 잘 된 고장으로도 유명했으나 군부대의 남벌로 지난 2006년, 2007년 수해가 극심했으며 올해는 집중폭우에 가뭄 피해가 겹쳤다는 것, 소식지는 또 “함경남도 정평군 정평읍에는 초가을부터 죽을 먹는 세대가 많이 보인다”며 “약 3분의 1정도가 지난 8월부터 죽을 먹었고, 가을이 되자 (추곡이 나온 때인데도) 죽을 먹는 세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언
  - 이는 흉작이 예상되는 데다, 장사 통제가 심해 돈 벌 방법이 없다보니, 보유한 식량을 아껴야 하기때문에 “좀 잘 먹는다는 집”에서도 두 끼중 한끼는 죽으로 때우고 있다고 소식지는 덧붙임.
- 北, 문화유적 보존관리 강조(11/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1월 ‘문화유적 애호월간’을 맞아 역사 유적과 유물의 철저한 보존, 관리를 강조, 신문은 5일 “여름철과 가을철에 여러 가지의 자연적 요인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손상이 간 역사 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보수 사업”을 벌일 것을 주문하면서 “겨울철에 문화유적 유물들이 계절적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지 않게 필요한 보존관리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주문
  - 신문은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 대해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역사 유적과 유물들의 보존관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모든 역사 유적들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





## 2. 대외정세

### 가. 유엔안보리 관련

#### ● 北 유엔 제재후에도 핵물자 위장수출(11/14,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6월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위장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엔의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뉴욕발로 14일 보도
-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난 6월 이후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위장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그룹의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내 8개 단체와 개인 5명을 대신한 다른 단체와 인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위장 공작으로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밝힘.
- 구체적으로는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관련업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재대상인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신한 북한관련 은행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또 북한의 수출입 무기관련 물자의 위장공작 수법으로 화물 목록의 위조, 허위 라벨의 사용, 유명 해운회사의 이용, 여러 차례에 걸친 화물의 교체선적 등도 지적
- 중간보고서는 유엔의 제재 효과와 관련, 유엔안보리가 지난 6월 12일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무역 적자는 1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 지난 2006년 10월의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718호)이 채택됐을 때도 북한의 무역적자는 연간 10억 달러로 증가했던 것으로 중간보고서는 추정

### 나. 북·미 관계

#### ● 오바마, 한국·일본 핵 우산 보장(11/14,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수십년간 대립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핵개발 포기)를 다하지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
-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확실한 길은 6자 회담에 복귀해 핵 확산방지조약(NPT) 가입 등의 약속을 지켜 한반도에 비





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역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핵 우산 보장을 역설

#### ● 보즈워스 방북 12월 중순 유력(11/13, 연합)

-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시기를 잠정적으로 12월 중순계로 정하고 북미간에 구체적 시기와 관련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정부 소식통은 12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12월 중순계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추수감사절 이전 방북은 어렵다”면서 “이번달 말까지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아마도 12월은 돼야 할 것 같다”고 언급
- 그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언, 12월 중순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14일부터 시작되는 셋째주나, 이에 앞서 1월 7일부터의 둘째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밝힌 바와 같이 보즈워스 대표와 소규모 범정부팀이 평양에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면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언급

#### ● ‘北긴장 고조 추가행동 말라’ 백악관 대변인 성명(11/12, 조선일보)

- 미 백악관의 로버트 기브스(Gibbs) 대변인은 10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측 함정에 선제사격을 가한 것과 관련,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 고조로 간주될 수 있는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언급, 기브스 대변인은 이날 총기 난사 희생자들의 추도식이 열린 텍사스주 포트 후드로 향하는 버락 오바마(Obama)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언급
-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을 통해 알아보라는 입장을 밝힘. 미 국무부의 필립 크롤리(Crowley) 공보담당 차관보는 10일 이번 전투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며, 한국 정부에 맡길 문제”라는 말 외에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음.
-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보즈워스 특사 파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것(방북)이 그 자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그는 “우리는 상황이 고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침착한 대응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다. 북·중 관계

##### ● 中, 北영사 사망 확인, 사인 분석중(11/13, 연합)

- 중국 당국이 10월 실종된 북한 선양 영사관 영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인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짐. 13일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영사관의 김모 영사가 10월 30일께 선양의 훈허(渾河)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됨.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중국 당국은 음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 임.
- 10월 초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영사관을 나간 김 영사는 이후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됐음. 40대 중반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설과 타살설이 엇갈리고 있음. 뚜렷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이 제기 있지만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고 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독살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음.

##### ● 中, 대북 무역통계 공개 않기로(11/10, 연합)

-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통계를 더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10일 알려짐.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해관통계’란 잡지를 통해 발표해 오던 북한과의 항목별 무역 통계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해관통계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8월부터는 총액을 제외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 라. 기타외교 관계

##### ● 佛대북특사, 北, 인권교류 제안 수용(11/14, 연합)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이 13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교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언급
- 랑 의원은 13일 오후 평양발 중국 국제항공(CA122)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뒤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스처를 취했다”면서 “프랑스와 인권 문제를 교류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 랑 의원은 5일 간의 방북 기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관리들과 총 10여 시간 가량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고 꾸밈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답변
- 그는 “이번 대화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몇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그는 협력방안 외에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주제가 논의됐다고 설명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평양



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만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북한에 다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 3. 대남정세

#### ● 대북 ‘쌀40만t·비료30만t’ 내년예산 반영(11/13, 연합)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이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금액을 반영, 통일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남북협력기금 약 6천160억원이 배정됐음.
- 이 액수는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국제 식량 가격 하락 때문에 올해의 같은 분야 예산 7천181억여원에 비해 액수 자체는 14.2% 감소, 정부는 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각각 올해와 같은 180억원과 250억원을 쓰기로 했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보건의료협력·산림녹화·농수산물 수송 등 ‘기타 인도적 지원’ 항목에 올해 401억원보다 약 22.9% 늘어난 493억원을 배정했음.
- 또한 남북경협 지원(무상)에 올해의 1천237억원보다 17.1% 늘어난 1천447억여원을 사용하기로 했음. 아울러 정부는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사업에 올해보다 1억원 증액된 8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지원에 역시 올해와 동일한 71억원을 쓰기로 했음. 이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중 순수 사업비는 올해보다 약 2억원 증액된 1조1천184억여원으로 책정됐음.

#### ● 국제옥수수재단, 北에 온실만들기 지원(11/11, 연합)

-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은 북한에 온실 건설을 지원하고 국내 및 북한, 네팔 등의 아동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 프로젝트, 2009 지구촌 빈곤아동돕기 캠페인’을 벌임. 11일 재단에 따르면,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에서는 모금액으로 북한의 농촌지역에 3.3㎡(1평)의 온실을 지어줘 겨울에도 옥수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 또 국내 및 북한, 네팔 아동들이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내복, 전기담요, 장갑 등 방한용품도 지원할 예정임.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北, 양자회담 결과따라 6자복귀” 거듭 확인(11/10)

-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성과를 얻을 경우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북한 정부 관리가 9일 거듭 밝혔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함.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리광일 부국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위협 제거”를 언급함.
- 이 회의에는 남북한 및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의 학자 및 전직 관료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 나. 미·북 관계

##### ● 美 골드버그 대북제재 이행관 교체(11/1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따른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총괄해 온 필립 골드버그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국무부 정보조사 차관보에 지명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이 방송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상원에 골드버그 차관보 지명을 통보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골드버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함. 골드버그 지명자의 후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음.

##### ● “北급변사태 논의, 中 영향력 강화 초래”(11/12)

-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2일 한국과 미국 정부 및 학자들 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책 논의가 중국의 대북영향력을 불필요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위트 전 담당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제4차 일민 외교안보포럼에서 ‘북한 급변사태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이 통일을 위해 무리해서 북한에 개입하려 한다면 불필요한 중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한국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 ‘중국 요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트 전 담당관은 이어 “북한 급변사태 대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 문제에서



-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 급변사태 대책 논의는 대부분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라며 “미래 북한의 불안전성에 대비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지만 그런 계획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점을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함. 워트 전 담당관은 “미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접근방식을 넘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또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현재의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그는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미국은 이른 시일 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려 하겠지만 이에 대해 실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보다 많은 관련 정보를 얻고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함.
  - 워트 전 담당관은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 북·미 관계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실무 역할을 맡았음.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음.

#### ● 클린턴 “서해교전, 美대표 방북 영향 안쥐”(11/1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 서해에서 전날 발생한 남북 함정간 교전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클린턴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가까운 장래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국무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클린턴 장관은 “우리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지금까지 나온 차분한 대응에 고무돼 있다”고 밝힘. 그는 이번 서해교전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보즈워스 대표를 보내기로 한 우리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함.
- 그는 “이는(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그 자체로서 계속해 나갈 중요한 조치”라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과 연관돼 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남북간에는 어제 본 것과 같은 종류의 충돌이 지난 수년간 있었다”면서 “우리가 (한국측에서) 받은 설명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함.
- 클린턴 장관은 이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 “이번 방문의 목적과 한계를 북한측에 명백히 했다”면서 “이는 협상이 아니다”고 강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북미간 실질적 협상이 아님을 거듭 확인함. 그는 “(보즈워스 방북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오도록 하는 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예상은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의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또 “보즈워스 대표를 북한에 보내기로 한 결정은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광범위한 협의 뒤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보즈워스 대표가 이번 기회를 완전하고 평화적이며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리의 시각을 파트너 국가들도 공유했다”고 전함.
- 그는 “한반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찾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 밖에 APEC 각료급 회의에서 주요한 지역 안보문제가 논의됐으며, 이 중에서도 북한 핵프로그램 문제가 가장 우려할 사안으로 논의됐다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미 국무부는 보즈워스 대표가 유관부처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후 연내에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임.

#### ● <2차 북핵위기 직후 파월 방북추진>(11/11)

- 우리나라 농축 핵프로그램 개발 문제로 제2차 북한 핵위기가 불거진 지난 2002년말 북·미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콜린 파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은밀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나타남. 연합뉴스는 10일 제레미 스톤 전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이 최근 작성한 회고록 ‘축매 외교, 평화를 위한 행동 반세기’라는 회고록을 입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함.
- 스톤 전 회장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FAS 회장을 지내면서 군축, 인권, 외교의 중요성을 주창했으며, 특히 그가 제안해 결실을 본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러시아에서 ‘제레미 스톤 제안’으로 불릴 정도로 군축분야에서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한때 파월 장관의 방북이 추진됐다는 이런 외교적 일화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지금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만간 평양을 방문하는 시점과 맞물려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재삼 보여주고 있음.
- 회고록에 따르면 스톤 전 회장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제2차 핵위기가 고조된 두달 후쯤인 12월 23일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현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고문)와 만나 파월 장관의 방북 추진구상을 논의함.
- 이들은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을 위한 해외 물품구매는 물론 흑연감속로 및 폐연료봉의 동결 해제를 연기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파월 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뒤 이들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주권, 불가침 조약, 경제활동 불간섭 등 기타 핵심문제들을 논의한다는



- 이른바 ‘조용한 제안(Quiet Proposal)’을 마련함.
- 북·미가 이런 협상안에 합의할 경우, 양측은 관계증진을 위한 ‘공동이니셔티브’를 합의형태로 발표한다는 입장도 정리됐음. 당시 북한은 파월 장관 처럼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어렵다고 판단, 다소 격이 떨어지지만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쓰기도 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방북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스톤 전 회장은 외교가의 말을 인용해 전함.
  - 스톤 전 회장은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특사에게 이런 구상을 설명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고, 그의 주선으로 주미 한국,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들과 각각 접촉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회고함. 그는 이듬해인 2003년 1월 9일 한국을 방문해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그해 주미대사가 됨)와 조찬을 하면서 ‘파월 방북 구상’을 설명했고, 한 총장서리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임.
  - 또 그는 운영관 당시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이후 외교통상장관이 됨)와 만났을 때 윤 간사가 “켈리 차관보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제안을 얘기하겠다”며 ‘조용한 제안’의 복사본을 챙겨갔다고 회고록은 전함. 당시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도 스톤 전 회장의 제안을 반겼으며, 특히 제안에서 한국의 통일부를 미·북 협상 성사를 위한 매개자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사의를 표했음. 다만 임 특보는 워싱턴의 대북 매파는 이런 구상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스톤 전 회장은 전함.
  - 스톤 전 회장은 자신이 추진했던 구상이 어떻게 무산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네오콘이 득세했던 점을 감안할 때 미 행정부 차원에서 현실화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스톤 전 회장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초청으로 1991년 북한을 방문한 뒤 그의 답방에 필요한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5년간 백방으로 노력한 게 황장엽 망명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술회하기도 함.

#### ● “北서해교전 美관심 끌려는 의도” <美전문가>(11/11)

-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의 남북한 합정 교전은 북한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함.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국방외교전문가인 던 청 연구원은 1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일어났다”면서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함.
- 던 연구원은 이번 서해교전의 의미를 “북한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동북아 현



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해석함. 북한이 이번 사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우리(북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한국 등 당신의 우방들에 영향을 주거나 잠재적으로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임.

-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청 연구원은 분석함. 그는 북한은 남한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남한이 주장하는 NLL에 동의하지 않는다. 대북 원조 중단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말함.
- 청 연구원은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 미국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려면 유연하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며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이 다시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함. 미국 해군연구소(CNA) 북한전문가인 켄 가우스 이사는 이번 서해교전과 관련,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설사 이런 일이 재발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가우스 이사는 또 이번 사건은 북한이 대화를 모색하면서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적대적인 행동과 대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양면전술일 수 있다고 분석함.

#### ● “오바마 지난주 보즈워스 방북 결정”(11/1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0일 보도함.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재개할지를 놓고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수개월 간 집중적인 협의를 벌인 끝에 보즈워스 대표를 북한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전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금융정상회의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보즈워스 대표를 평양에 보내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일치된 노력을 견지해 왔음.
- 미국 관리들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일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연말 이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바마 대통령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함. 보즈워스의 이번 방문은 오로지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종 미군의 유해 발굴 재개 및 북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미국 파견은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관리들은 밝힘.
- 한 관리리는 “우리는 2005년 9.19 합의에 근거해 협상을 재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임을 북한이 이해하고 있다는 언질을 원했고 그런 언질을 받았다”면서 “최선의 상황에서도 북한은 단지 최근의 도발행위 이전 경로로 돌아오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마지막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이며, 북핵 6자회담은 같은 해 12월 핵검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함.

#### 다. 중·북 관계

##### ● 中, 北영사 사망 확인..사인추정 엇갈려(11/13)

- 중국 당국이 지난달 실종된 북한 선양 영사관 영사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인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짐. 13일 중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영사관의 김모 영사가 지난달 30일께 선양의 훈허(渾河) 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음.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중국 당국은 음독에 의한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임.
- 지난달 초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영사관을 나간 김 영사는 이후 연락이 끊긴 채 행방불명됐음. 조사에 나선 중국 당국은 사체가 발견되기 수일 전 훈허 변에서 그의 신분증을 발견, 그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왔음. 40대 중반으로 경제 분야를 담당해온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살설과 타살설이 엇갈리고 있음.
- 뚜렷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자살 가능성이 제기 있지만 평소 성실하게 근무했고 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독살됐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음.

##### ● “中, 대북 무역통계 공개 않기로”(11/10)

- 중국이 북한과의 무역 통계를 더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10일 알려짐. 중국의 세관인 해관총서는 ‘해관통계’란 잡지를 통해 발표해 오던 북한과의 항목별 무역 통계를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해관통계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해 왔지만 8월부터는 총액을 제외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임.
- 해관통계는 대신 그동안 없었던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아시아국’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석탄과 원유, 석유제품, 곡물 관련 통계를 언급해 북한과의 교역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함. 대북 무역통계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국 상무부도 마찬가지임.
-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월까지의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통계’를 통해 북한과의 수출입 총액을 발표했지만 9월분 통계에서는 북한과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음. 중국이 발표해 온 통계자료





는 그동안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그러나 중국이 비공개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앞으로는 서방 각국과 대북 소식통들이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중국 측에 별도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중국이 특정 국가와의 교역 규모를 숨기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 위반은 아닌지 문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해관총서 등에 갑자기 비공개로 돌아선 이유를 물었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 줄 수 없지만 앞으로도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함.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역통계가 외부에 공개되는 사실상의 유일한 통로인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무상 원조 및 물밑 거래 등 감추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 이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수출은 전년 대비 23.0% 늘어난 11억3천만달러, 수입은 32.7% 늘어난 26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액 38억2천만달러를 기록함. 지난해 중국과는 수출은 7억5천만달러, 수입은 20억3천만달러를 기록해 대중 무역 의존도는 무려 73%에 달함.

## 라. 기타

### ● 르몽드 “佛-北 관계개선 다자회담 틀내에서”(11/15)

- 프랑스와 북한 간의 관계개선은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자회담의 틀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14일 전함. 르몽드는 이날 ‘프랑스와 북한 사이의 정치적 대화의 시초’란 제목의 평양발 필립 폰스 특파원의 기사를 통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대북특사 자격으로 5일간의 평양방문 일정을 마치고 13일 귀국 길에 오른 자크 랑 하원의원의 방북 내용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힘.
- 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방북에 앞서 자국을 방문한 랑 의원에게 프랑스와 북한 간의 대화 재개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신중한 태도를 취해 줄 것을 권고했다고 함. 랑 의원은 9일부터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잇따라 방문해 북핵 위기에 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을 들었음.
- 르몽드는 랑 의원의 방북은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지정학적 현안에서 프랑스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 북한 측과 정치적 대화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이어 신문은 프랑스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북한 내에서 프랑스어 교육이 쇠퇴한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 내에서의 입지도 없어졌다고 분석함.

- 핵문제와 관련, 랑 의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핵확산 활동에 전념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진 것으로 신문은 전함. 신문은 또 프랑스와 북한 양측이 랑 의원의 방북을 유익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힘.

### ● 佛 대북특사 “北, 인권교류 제안 수용”(11/14)

-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자크 랑 하원의원이 13일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교류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함. 랑 의원은 이날 오후 평양발 중국 국제항공(CA122)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뒤 프랑스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스처를 취했다”면서 “프랑스와 인권 문제를 교류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유럽연합과 인권 문제에 관한 대화채널을 과거에 중단한 바 있다”고 말함. 랑 의원은 5일 간의 방북 기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 등 북한 관리들과 총 10여 시간 가량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고 꾸밈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함. 그는 “이번 대화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등 몇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그는 협력방안 외에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를 포함해 모든 주제가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망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면서 “만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북한에 다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함.
- 랑 의원은 이날 평양에서 APTN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프랑스와 북한 간 수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북했다면서 “다음 주 귀국해 사르코지 대통령에게 방문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함. 9일 평양 방문을 시작한 랑 의원 일행은 이날 베이징에서 하룻밤을 머문 뒤 14일 프랑스로 향할 예정임.

### ● “임태희, 싱가포르서 김양건과 회동”<NHK>(11/12)

-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지난달 17, 18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NHK가 12일 보도함. 방송은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그러나 개최 장소를 둘러싸고 대립, 성과 없이 끝났다”고 지적함.
- 방송에 따르면 당시 접촉에서 한국측은 과거 2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실시된 만큼 이번에는 서울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함.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한국으로 갈 준비가 돼 있지 않



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측은 남북적십자회담에서 10만t의 옥수수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한국측이 1만t밖에 보내지 않기로 한데 대해 항의했고, 이에 한국측은 소규모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방송은 당부했다고 방송은 덧붙였음.

● “美·中, 北정권교체 원치않아” <美전문가>(11/11)

-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당분간 북한에서 혁명을 촉발시킬 내·외부적인 압력도 없다는 분석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음. 램프 해시그 메릴랜드 대 비상근 교수는 10일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옹공단 미국 국방연구원(IDA) 책임연구원과 공동집필한 ‘은둔의 왕국 북한 주민의 일상’ 출간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힘.
- 해시그 교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혁명과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성공을 거뒀다. 당분간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함.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명에 대한 내·외부적인 압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임.
- 북한 붕괴에 따른 대량난민사태는 수천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주변국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해시그 교수는 “중국은 분명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도 더는 북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정권 붕괴에 따른 교체보다 안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와 함께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대화 지속 외에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해시그 교수는 전망함. 그는 미국을 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국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보다는 단지 대화만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함.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외부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줘 북한 정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해시그 교수는 덧붙였음. 고위급 접촉 시도를 통한 변화추구는 오히려 북한 체제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임.

● EU집행위 “서해교전은 걱정 끼치는 상황”(11/10)

- 유럽연합(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10일 발생한 ‘서해교전’에 대해 “걱정을 끼치는 상황”이라고 우려함. 집행위 당국자는 이날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최



근 한반도 동향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서해에서 발생한 양측 충돌은 걱정을 끼치는 상황으로 우리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함.

- 이 당국자는 “우리는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북한이 신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대화로 핵 문제 등 이슈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한반도관계대표단은 내년 5월 말 평양과 서울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 김정일 “핵 포기시 이라크처럼 될까 두려워” <NHK> (11/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9월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당시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포기 시) 이라크처럼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고 NHK 방송이 전함. 이 방송은 지난 8일 밤 방송된 ‘NHK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외무성이 극비 문서로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북·일 정상회담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함.
- 방송이 전한 녹취록에 따르면 고이즈미 당시 총리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하면 국제사회가 경제 지원을 해 줄 것”이라면서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당부한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이렇게 답함.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NHK는 전함.
- 당시 관방장관으로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방북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전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함. NHK 측은 “현재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만큼 7년 전 전격적인 북일 정상회담을 교훈 삼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밀문서를 공개했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신미국안보센터, 대북협상 8대 전략 제시> (11/10)

- “북한의 불확실한 비핵화의지는 포괄적인 합의 추구를 통해 시험해야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9일 ‘대북협상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 대북 핵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8가지 협상장애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을 이같이 제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공적인 대북협상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요인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이를 극복하려면 포괄적인 합의를 추구, 북한의 진의를 시험해야 함.

-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합의를 마지막에 하는 합의방식임.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협상 초기에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합의 방식을 채택해야 함.
- 세 번째는 북한이 미국의 추가양보를 끌어내려고 제한적인 합의를 이용하는 것임. 이런 북한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줄이는 비가역적인 조치를 주장해야 함.
- 네 번째는 미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이런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다자 틀을 이용해 미국의 레버리지를 증대시키는 한편 양자협상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 다섯 번째는 북한의 유일한 의사결정자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임. 고위급 방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여섯 번째는 미의회가 대북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관계 없이 관련 예산을 통제하고 있음. 북한과 어떤 합의를 했더라도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일곱 번째는 협상이 집행단계에서 들어질 수 있다는 점임. 이에 대비하려면 잠재적인 합의사항 이행 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함.
- 여덟 번째는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견 불일치로 협상이 와해될 수 있음. 이를 막으려면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에 대해 문서형태로 동의를 받고 매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해야 함.
- 보고서는 또 북한 외무성의 강석주 제1부상과 김계관 부상이 북한 측 협상대표 역할을 계속해온 것과 관련,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의 과거 협상에 대한 실망감이 미국의 협상대표들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창의적인 돌파구 마련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협상의 속도와 범위에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권력이 불확실하거나 이전단계에 있다면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의지를 보여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함.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현재 추구하는 외교적 전략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CNAS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50명이 넘는 전·현직 정부 관료와 학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한·미 대북 협상 전문가들과 심도있고 다양한 인터뷰를 했다고 밝힘.

#### ● 백악관 “오바마 방한 초점은 북한”(11/10)

- 제프리 베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 문제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이뤄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베이더 보좌관은 이날 오후 콘퍼런스 콜(전화 회견)을 통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지가 의제가 될 것이며, 비핵화 및 과거(북한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베이더 보좌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은 물론, 특히 6자회담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했다”고 강조,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 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협력을 구할 것임을 시사함.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아프간에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파견키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 등 점증하는 한국의 국제적인 역할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베이더 보좌관은 전함.
- 또 벤 로즈 NSC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도 “한국은 여러가지 이슈와 관련해 중요한 동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에 감사하고 있으며, 방한기간 경제회복과 (북한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후 주미·중군을 찾아 격려할 것”이라고 말함.
- 마이클 프로먼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 측 인사들과 한·미 FTA 처리 일정 등을 포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프로먼 부보좌관은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산 자동차 수출문제에서 진전을 이룬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힘.

### ● 美 “李대통령 대북접근 전폭 지지”(11/9)

-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에 동의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순방을 앞두고 이날 한국의 연합뉴스 및 일본 언론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가 보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 이뤄져온 협력의 수준은 훌륭한(superb)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함.
-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 대북 협상 방식에 대해 한·미 정상간 이견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임. 그는 “북한에 조금씩 주고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종전의 대북 협상방식은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진단한 뒤 “그랜드 바겐 제안은 경제지원 및 기타 정치적 분야에 걸쳐 북한을 어둠에서 동북아시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런 접근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함.

- 이 당국자는 그랜드 바겐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및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관련결의에 의거한 자신들의 의무 사항에 따라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에 관해 스스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한·미 정부의 공통된 인식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의 대화추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함. 또 그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헤어진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환영하며, 북한내 한국군 포로들도 인도적 견지에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말함.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의 의미에 대해 “미국에 있어 한국은 ‘지역내 한국’(Local Korea)에서 ‘세계속의 한국(Global Korea)’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하면) 비단 한국문제 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초국가적인 문제, 한국과 미국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그간 매우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예외적일 정도로 주목을 받은 것은 한·미 양자관계의 중요성과 질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때 아시아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연설을 할 계획”이라며 “아시아가 미국에 왜 중요한지, 미국은 아시아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라고 소개함. 또 그는 “연설은 미국과 아시아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긍정적인 힘을 강화해 나가는 이른바 ‘선순환’, 즉 호혜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건강한 통합을 촉진하려는 미국의 대(對) 아시아 개입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함.

#### 나. 한·중 관계

##### ● “오바마, 중국에 탈북자문제 말해야” <WSJ>(11/15)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년 전 동독인들의 탈출이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한 한 요인이었던 것처럼 탈북자 물결이 북한 정권의 몰락과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탈북자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함.
- WSJ는 14일 ‘한국의 베를린 장벽’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힘. WSJ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는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많게는 30만명에 이르지만 중국은 이들을 추적해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국제법에 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탈북자를 도울 경우 벌금이나 체포, 투옥될 수 있고 심지어 탈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범죄로 다루지고 있다고 지적함.

- WSJ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려다 붙잡힌 남자 1명과 여자 3명, 6살짜리 소년 등 탈북자 5명이 북한 국경 인근의 중국 수용소에서 북한 송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보내질 경우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수용소로 향할 것을 우려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의 석방을 중국에 요청함으로써 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함.
- WSJ는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가 지난 5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이 특사에 취임하면 중국 정부에 탈북자 추방과 강제 북송을 하지 말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을 전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서 중국으로의 탈북자 물결이 넘쳐날 경우 미국이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다. 한·일 관계

##### ● 한·일, 북미대화 향방 주시(11/9)

- 6자회담 한국측 수석 대표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일본을 방문,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미국이 평양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북미 직접 대화의 향방을 주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음.
- 아울러 두 사람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음. 또 두 사람은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미국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해 나가기로 함.
- 이날 회담에서 위 본부장은 지난 5~7일 미국을 방문해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도너번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김 6자회담 특사 등과 만나 협의한 내용도 일본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짐.

#### 라. 미·중 관계

##### ● 中 “美 저금리 정책, 글로벌 경제 위협”(11/15)

-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해외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부추기고 세계 경기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15일 비판함. 류밍강(劉明康)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날 베이징의 한 금융문제 관련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함.
- 류 주석은 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현행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과 달러의 약세가 새로운 시스템상의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런 상황은 이미 광범위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 달러 자금을 빌려 각국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를 부추기고 글로벌 자산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함.

- 그는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주식 및 자산 시장의 투기를 부추기고 글로벌 경기회복, 특히 신흥시장의 회복에 새롭고 견뎌내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이달 초 연준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제로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들이 해외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빌렸음.
- 류 주석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2조2천700억달러 규모의 엄청난 외환보유고 가운데 3분의 2 가량의 자산이 달러화로 투자된 상태여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경우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됨. 그는 또 최근 각국에서 보이는 경기 회복 조짐은 상당 부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로 실제 기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그리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 美·中, 오바마 방중 앞두고 무역전쟁 격화(11/9)

- 1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9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함. 지난 9월 중국산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기로 한 미국은 5일 강관 제품에 대해서도 최고 9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비판정을 내림.
-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덤핑 및 불공정 보조금 혐의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곧바로 인쇄용지로 쓰이는 중국산 코팅지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리는 등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무역전쟁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함. 이들은 “중미 무역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위안화 환율 문제”라면서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격화하고 있다”고 말함. 중국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마. 미·일 관계

### ● 오바마 “한국·일본 핵 우산 보장”(11/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힘.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위치를 규정하는 한편 아시아 지역의 재반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함. 일본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시내 산토리홀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강연에서 이같이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수십년간 대립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핵개발 포기)를 다하지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확실한 길은 6자 회담에 복귀해 핵 확산방지조약(NPT) 가입 등의 약속을 지켜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핵 우산 보장을 역설함. 그는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지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함.
- 그는 특히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력에 상응한 중국의 국제역 역할을 부각시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으로 아시아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인 개입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함.
- 그는 “미국은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종결(비준)에 노력하는 한편 여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협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작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은 미국의 소비자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드라이브에 의존한 세계경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균형 잡히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촉구함.





### ● 하토야마-오바마 정상회담..동맹 강화 합의(11/14)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일본을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동맹 강화에 합의함. 전용기 편으로 도쿄(東京)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바마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열린 회담 후 하토야마 총리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없는 세계'의 실현 및 지구 온난화 대책,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 공동 문서를 발표함.
-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하토야마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 양국 각료급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짐.
- 이어 하토야마 총리는 아프가니스탄 지원과 관련, 올해부터 5년 간 총 5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함. 두 정상은 또 내년이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년인 만큼 이를 계기로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음.
- 하토야마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함.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및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연대를 강화하기로 함.

### ● <美-日 관계 90년대 이후 가장 냉랭>(11/1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의 시작으로 13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일 관계가 1990년대 무역 분쟁 이후 가장 심각한 냉각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함. 신문은 선거 유세기간에 공공연하게 미국을 비난했던 당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후 미-일 관계가 대립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미국의 우려가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한때 고급 승용차나 반도체 교역 문제로 대립했던 양국은 이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함. 실제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후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를 요구하면서 자민당 정권에서 합의한 주일미군 재편 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최근 일본이 해상자위대에 의한 인도양에서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 지원 활동을 내년 1월부터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일본의 대미 외교노선이 달라졌음을 분명히 보여줌. 또 지난 2006년 양국 정부가 주일미군 재편 작업의 하나로 합의했던 주일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도 일본 정부가 당초 합의와 달리 오키나와현 밖으로의 이전을 검토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음.



- 오바마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일본 정부는 워싱턴의 기류를 감지하기 위해 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을 워싱턴으로 보내기도 함. 워싱턴 칼리지의 앤드루 오로스 교수는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하려는 메시지는 ‘제발 우리가 결정을 내리도록 밀어붙이지 말아달라. 그럴 경우 너희가 듣고싶지 않은 말을 듣게 될 것’이었다”고 말함.
- 그는 일본의 신 정권이 “선거 공약을 되돌리려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며 “역사적인 선거였고 50년간 지속돼온 보수정권을 교체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다”고 지적함.

### ● 美·日 외무 “후텐마기지 이전 조기 결론”(11/12)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양국간 갈등을 빚고 있는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를 조기에 결론내겠다는 의향을 표시했다고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함. 오카다 외상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클린턴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클린턴 장관은 “(일본 측이 기지이전 문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해, 기존 미·일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 하지만 클린턴 장관은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결론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본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함.
- 두 장관은 구체적인 이전시기나 이전 지역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조만간 설치될 각료급 실무팀에서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원칙론만 밝힘. 클린턴 장관은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 앞으로 5년간 50억 달러의 민생 지원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만족감을 표시함.

### ● 美백악관, 日 아프간 민생지원 환영 성명(11/12)

- 미국 백악관은 11일 일본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민생지원비로 향후 5년간 50억달러 규모를 지원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 지원약속도 조기에 이행키로 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함. 백악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아프간에 50억달러를 제공하고 지난 4월에 약속한 파키스탄에 대한 10억달러 경제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힘.
- 백악관은 또 “이번주에 일본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새롭게 하고 아프간과 파키스탄, 중요한 양자 문제 등에서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인도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내년 1월 종료하는 대신 아프



간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아프간 지원방안을 발표함.

#### ● 美·日 정상회담, 환경·핵군축 집중 논의(11/12)

- 13일 오후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와 핵없는 세계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현지언론이 12일 보도함. 하지만 양국의 핵심 현안인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등 미군 재편 문제는 협상 의제에서 제외돼 이번 정상회담이 내용없는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마이니치신문은 미·일 정상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함. 공동발표에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공조 강화를 담을 것으로 알려짐.
-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국 정상이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함. 요미우리신문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핵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공조방안이 논의되고 공동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내년 3월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전보장 정상회의’와 내년 5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핵 확산 방지조약(NPT) 재검토회의의 성공을 위해 일본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임.
- 두 나라 정상은 또 북한에 무조건적인 6자회담 즉시 복귀를 촉구하고,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자의 수송 혐의가 있는 북한 관련 선박과 항공기의 화물검사를 요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유엔 가맹국들에 요청하기로 함.

#### 바. 중·일 관계

##### ● <日 민주당-中 공산당 급접근>(11/12)

-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음. 양측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중일 교류협의기구’ 회의를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 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은 다음 달 당 간부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할 예정임.
- 오자와 간사장은 11일 회의에 참석 “21세기에서 양국이 인류 역사에 남을 동반관계로서의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함. 중국측 대표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찬성하고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함. 이 협의기구는 오자와 간사장이 민주당 대표로 재직하던 2006년에 만들었음. 출범 이후 한동안 모임이 중단됐으나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다시 열렸음. 이번이 세 번째임.



- 그동안 중일 외교는 여당이던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뤄졌음. 그 가운데서도 특히 1972년 중일 국교를 수립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총리가 중심이 된 세력이 이를 담당해 왔음. 그러나 오자와 간사장은 자민당을 탈당하고 야당을 이끌어 오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힘을 쏟아왔음.
- 오자와 간사장은 이번 중일 교류협력회의에 초선 의원 140여명 모두에게 참석을 지시하는 등 중국 중시 방침을 직접 보여줌.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채널에서 대중 외교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대중 외교의 이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 中·日, 환경관련 계약 무더기 체결(11/9)

- 중국과 일본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계약을 무더기로 체결해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상하이증권보(上海證券報)는 9일 중국과 일본이 제4회 중·일 에너지·환경 종합포럼을 계기로 42건의 에너지 환경보호 협력 프로젝트 계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함.
-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토펬(曹妃甸)신구에서 8일 열린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절약센터 건립과 윈난(雲南)성의 호수 덴츠(전<삼수변+眞>池)의 수질오염 처리, 에너지절약 시범 과학도시 건설, 차오페이토펬의 순환형 오수 처리, 다롄(大連)시 생태 산업단지 조성, 전자부품산업 폐수 자원화 프로젝트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제4회를 맞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자국의 환경보호 및 에너지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키며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세전화(解振華)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축사에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산업은 중국의 전략적인 신성장 산업으로 미래의 전망이 매우 밝다”면서 “2012년이 되면 중국의 관련 산업 분야의 생산가치는 2조8천억위안(47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함.
- 세 부주임은 “중국 정부는 환경 분야에 올해에만 58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매년 15% 이상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산업은 녹색 및 저탄소 경제와 순환경제 등이 주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사. 기타

#### ● “兩岸, 신해혁명 100주년 공동기념하자” <중학자>(11/15)

- 중국과 대만이 쑨원(孫文)의 주도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수립한 지난 1911년의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자는 제안이 중국학자로부터 나왔음. 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장하이핑(張海鵬) 연구원은 14일 타이베이에서 폐막한 ‘양안-60년’ 학술세미나에서 오는 2011년 10월10일 대만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국공)이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중국 근대사 전문가인 장하이핑 연구원은 국·공은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식에 이어 오는 2015년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도 함께 거행, 하나의 중국에 대한 인식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건의함. 이 제안은 중국이 오는 2012년을 목표로 양안평화협의 비망록을 체결한다는 일정표를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정치협상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설과 때를 같이해 주목됨.
- 장 연구원은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식을 공동 개최하기위해 내년에 국공이 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활동의 주내용은 양안화해, 국공양당 화해, 중화민족단결, 미래를 향한 공동 발전 등으로 하자고 말함. 그는 또 이 기념식에 국공이외에 양안의 다른 정당들도 참여토록 하고 이 기념식에서 신해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공동 선언하자고 제의함.
- 장 연구원은 국공은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항일전쟁 승리 70주년(2015년 8월), 쑨원 탄신 150주년(2016년), 5.4운동 100주년(2019년)등의 기념식을 잇따라 열어 양안 인민간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응집력을 높이며 위대한 중화부흥을 함께 이룩하는 의지를 다지자고 역설함.
- 양안간 정치협상 착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대만 ‘태평양문화기금회’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중국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외교 고문격인 정비젠(鄭必堅) 전 중앙당고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28명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정치협상을 의제에 포함시켜 관심을 끌었음.
- 중국대표단에는 마오쩌둥(毛澤東) 통역과 프랑스대사를 역임한 우젠민(吳建民) 중국외교학원 원장, 영국대사를 지낸 마전강(馬振崗)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인민해방군에서 명망이 높은 퇴역 중장 리지진(李際均) 중국손자병법연구학회 회장, 위커리(余克禮)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장 등이 포함됐고, 대만에서는 85명의 학자, 전문가, 영향력 있는 당·정·군 고위 은퇴 관리들이 참석함.

#### ● 오바마, 아·태자유무역지대 창설 기대 키워 (11/1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에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것에 대해 친 무역주의 성향의 미 의회 의원들과 재계인사들이 14일 환영하고 나섰음. 오바마 대통령이 도쿄와 싱가포르에서 칠레와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으로 구성된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참여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무역이 환태평양 지대로 더 확대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임.
-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전 세계에 걸쳐 다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미국의 번영뿐만 아니라 세계의 번영에도 중요하다”고 지적해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하면서 세계자유무역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에 대해 켈먼 코언 미 통상비상위원회(ECAT) 위



원장은 “여러 아시아 국가가 무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미국이 더 이상 외곽에 머물지 않고, 가장 중요한 지역인 아시아의 자유무역확대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계속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통합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자유무역확대 움직임을 환영함. 그는 또 이것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시아와의 연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함.

### ● 일본, 베트남에 13억弗 지원(11/14)

- 일본이 베트남의 경제개발 가속화 지원을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기로 함. 베트남 일간 탕니엔은 14일 최근 일본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메콩강 유역 5개국 정상회의에서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 1천198억엔(13억달러)의 ODA를 제공받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지난 10일 이뤄진 양국 합의에서 일본은 베트남의 경기부양책에 479억엔(5억3천만달러)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빈곤감소지원, 중소기업 육성, 타이빙 화력발전소 건설 및 배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또 수도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시를 연결하는 1번 고속도로 상의 우회도로 건설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인프라 구축 등에도 ODA가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일본은 지난 1992년부터 베트남에 모두 1조3천690억엔(151억달러)의 ODA를 제공해 최대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함.

### ● 李대통령 “DDA협상, 내년중 종료 노력해야”(11/14)

-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제17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과 보고르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함.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DDA의 이른 시일내 종결”이라며 “DDA는 그동안 약속돼온만큼 2010년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작년 페루 리마 회의에서도 그랬고, 각 정상들이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역설했는데도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며 “확신이 부족했기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함. DDA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가 합의되면서 출발했으나 각국의 이견이 조율되지 못해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은 또 “15년전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보고르 선언이 도출됐다. APEC이 얼마나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앞서갔던 협력공동체인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자유화 목표시기가 내년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보고르 선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보고르 선언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정상회의에서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채택된 것으로, 선진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FTAAP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함.
-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음.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조치와 함께 국내 규제개혁 추진도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작업은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 APEC 정상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함.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한국)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임.

#### ● **李대통령·러드 濠총리, 출구전략 공조 추진(11/14)**

- 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해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선택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회담에서 미국 피츠버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특히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개별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출구전략 등 협력체계의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함.
- 러드 총리는 남북한간 서해교전 사태를 거론하며 “최근 북한과 일어난 일을 보고 한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연대감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황분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양국 정상은 또 내



년 6월 캐나다 및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균형성장, 국제금융 기구의 지도 및 관리 개혁 등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함.

- 이 대통령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G20을 세계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논의의 장으로서 제도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비(非) G20 회원국과의 협력도 증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함께 회의 결과를 요약 발표하는 역할을 맡음. 이 대통령은 이어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 자문기구인 'APEC 기업인 자문위(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경제위기 대응과 역내 비즈니스 환경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싱가포르 동포 및 진출 기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도 갖음.

#### ● 한-싱 “그랜드 바젠으로 북핵 해결”(11/14)

- 이명박 대통령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13일 ‘그랜드 바젠’ 구상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함.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오후 싱가포르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세계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싱가포르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 열려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회의가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를 긴밀히 하고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이번 APEC 회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제가 한국이 내년도에 개최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도 발전적으로 다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동안 한국이 통화스왑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함.
- 리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그랜드 바젠 구상에 대해 “북핵 해결을 위한 대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지지의사를 밝혔으며,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미국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젠’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이밖에 리 총리는 내년 5월 미국 등 주요국들이 참석하는 국방, 안보 회의인 ‘샹그리라 대화’에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참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 메드베데프 “러시아, 아·태 경제통합 준비돼”(11/1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 통합에 참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 제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14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출범 20주년을 맞는 APEC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 같이 말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APEC은 지난 20년 간 국제 경제와 정치 등 여러 면에서 독립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런 역할은 계속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20주년인 올해가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능할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특히 “APEC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각 회원국의 발전 수준과 서로 다른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 공개 대화와 합의에 대한 약속, 의견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고 말함.
- 이어 그는 “러시아는 그간 자유 무역 투자 시스템 구축 노력을 다하겠다는 가입 당시의 약속을 지켜왔고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구조 개혁, 투명성 확보, 부패방지 등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러시아는 앞으로도 역내 다른 회원국들과 각국의 혁신적(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아·태 자유무역역지대(FTAAP) 추진 방안과 관련, “우리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이 역내 경제 통합에 직접적으로 관여되기를 바란다”면서 “러시아는 역내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함.
-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있고 이 영광스런 임무는 큰 책임과 약속이 따른다”며 “2012년 회의가 생산적이며 가장 양질의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함. 세계가 아직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APEC이 위기 이후 발전을 위한 최적의 모델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그는 “APEC은 국제 경제 위기 논의를 통해 그 효율성과 유연한 접근 방식, 그리고 국제 변화에 필요한 대응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국제통상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APEC의 태도에 동감한다”며 “각국이 자신의 생산자(기업)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지만 지나친 보호주의 장벽은 자유 경쟁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산업발전에 이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14일 기조 연설할 예정이며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짐.



### ● 오자와 내달 방한..민간 교류 차원(11/13)

-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일본 민주당 간사장이 내달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 12일 오후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런 계획을 밝힘. 일본 민주당 측에 따르면 오자와 간사장은 방한 기간 대학 강연 등 민간 차원의 교류에 나설 방침이며 정부 요인 등과의 회담은 아직 계획돼 있지 않음.
- 오자와 간사장은 이 자리에서 제일 한국인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과 관련, “(의원 입법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머지않아 정리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음. 오자와 간사장은 방한에 앞서 중국도 방문함.

### ● “단기적으로 위안화 절상 없다”<中전문가>(11/13)

- 중국 전문가들은 13일 위안화 평가절상 허용설과 관련, 단기적으로 위안화가 평가절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함. 중국 신화통신은 탄야링(譚雅玲) 중국 외환투자연구원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인민은행의 보고서는 위안화 환율 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도함.
- 중국인민은행은 11일 3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국제 자본의 흐름과 주요 통화들의 움직임에 근거해 위안화 환율 결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탄 원장은 “중국인민은행이 새로 밝힌 내용은 앞으로 환투기를 줄이고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향후 환율 결정 방식은 중국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수출이 겨우 회복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위안화가 갑자기 평가절상되면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며 “환율정책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함. 인젠핑(殷劍峰)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실 주임은 중앙은행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 자본 흐름에 더 많은 신경을 쏟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함. 인 주임은 “경제 상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서방과는 달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함.

### ● “中, 80년대 파키스탄에 농축우라늄 제공”<WP>(11/13)

- 중국이 지난 1982년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양의 농축 우라늄을 파키스탄에 은밀히 제공했다고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폭로함.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칸 박사의 비망록을 워싱턴 중근동정책연구소에 재직 중인 사이먼 헨터슨 전 파이낸셜타임스 기자로부터 입수해 13일 보도함.
- 칸 박사는 2004년 가택연금 이후 작성한 11쪽짜리 자술서와 아내에게 별도로 보낸 서한에서 1982년 당시 이미 핵실험을 마친 중국은



농축 우라늄 50kg과 함께 핵무기 설계도면을 파키스탄에 제공했다고 폭로함. 칸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파키스탄군은 C-130 수송기를 이용해 중국 서부의 우루무치에서 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 50kg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아 5개의 스테인리스스틸 상자에 담아 파키스탄으로 귀환함.

- 이 같은 중국 측의 ‘핵 선물’은 1년 전 마오쩌둥과 줄피카르 알리 부토 파키스탄 총리의 밀약에 따른 것이라고 칸은 주장함. 미국 정부는 당시 이런 사실을 파악했으나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은 채 사실을 계속 숨겨온 것으로 나타남. 이후 핵확산의 고리는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임.
- 미 당국은 칸 박사가 중국 측 설계도에서 파생된 핵무기 설계정보를 이란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음. 2003년 리비아는 칸 박사를 통해 이 도면을 입수했다고 밝히기도 함. 칸의 폭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노 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WP의 확인 취재에 대해 “중국은 1992년부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가입국으로서 핵확산 방지의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며 어떤 형태로든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힘. 미 국무부 P.J. 크롤리 대변인도 우라늄 이전에 대해 중국 측에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WP의 질문에 “미국은 25년간 중국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오면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서) 진보를 이뤄냈다”며 “레이건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답해줄 수 없다”고 말함.

### ● 메드베데프 “러시아 경제 현대화 시급”(11/13)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12일 소비에트 시절의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제 현대화가 러시아에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의회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비롯한 각종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힘.
- 2개 국영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연설장에는 그의 정치적 스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 연방의회(상원)와 국가두마(하원) 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연설 내내 63차례의 박수를 보내는 등 취임 2년을 넘기는 그에 대해 뜨거운 성원을 보냄.
- 특히 이날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연설 시간은 총 100분으로 지난해 85분보다 15분이 더 길어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 정부가 제 모습을 갖춘 1993년 이후 역대 최장 시간 국정 연설로 기록됨.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 외교보다는 최대 현안인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장기 경제 발전 청사진 제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
- 그는 “러시아가 아직도 원시적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 경쟁력은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에트 시절에



너지와 중공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첨단 정보기술과 통신, 원자력, 우주로 방향을 고개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과거 고유가 시대처럼 개혁이 우리를 기다려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 현대화와 전체 산업에서 혁신이 필요하며 우리가 사는 길은 그것에 달렸다”고 강조함.

- 그는 “국제 금융위기로 러시아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외부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기반성을 촉구함. 이는 과거 푸틴 총리가 금융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려던 것과는 다른 주장이어서 시선을 끌었음.
- 그러면서 그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수술의 처음 대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국영기업을 지목함. 그는 “정부는 효율성을 높일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만 도와야 한다. 비효율적 기업은 반드시 시장을 떠나야 한다”면서 “많은 특권이 부여받고 있지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은 더는 미래가 없을 것이고 민간인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아울러 그는 경제 부문의 국가 간섭이 대폭 줄어들어야 하며 경제는 국민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특히 “아직 시장 회복은 불안한 수준”이라며 “절대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며 위기 극복 대책을 계속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함.
- 그는 또 “극동과 11시간 시차가 나는 것이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면 이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함. 이어 그는 취임 초반부터 강조해온 공직자 부패 문제를 언급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4천 건의 부패 사건이 보고됐다”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관리들은 교도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미명으로 국기를 불안에 빠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되며 북카프카즈 지역에 만연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리즘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언함. 그는 또 국방 분야와 관련, “내년에 3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3개의 핵 잠수함, 5기의 이스칸데르 단거리 미사일 등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힘.
-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 자본이 유입하고 첨단 기술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정책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함. 또 자신이 지난해 제기한 유럽안보조약기구 창설에 대해 “효과적 안보기구가 있었다면 지난해 그루지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안보 조약 기구 창설에 대한 다른 나라의 협조를 요청함.
- 한편, 임기 2년째를 맞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여전히 언론이 통제되고 있고,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가 하면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가 작용하면서 취임 초반 그가 그렸던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구





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 러시아 국민 상당수가 아직도 푸틴 총리를 실제 최고 정책결정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 하토야마 “오자와, 총리가 됐어야 할 분”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민주당 간사장에 대해 “원래 총리가 됐어야 할 분”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음.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11일 관저를 예방한 중국 공산당의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에게 “저는 오자와 총리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총리가 됐다”고 말함.
- 그는 또 오자와 간사장에 대해 “원래 총리가 됐어야 할 분”이라고 추켜세웠음. 이는 올해 5월초 정치자금 문제로 낙마하기 전까지만해도 오자와씨가 민주당의 대표였고 자신은 오자와 대표를 보필하는 간사장이었던 점을 상기시킨 것임. 이는 대화 상대에게 솔직하고 예의바른 것으로 알려진 하토야마 총리의 단순한 ‘인사말’로 돌릴수도 있지만 심중에 두고 있던 ‘본심’을 너무 솔직하게 토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음.
- 하토야마 총리의 중국에 대한 극진한 관심 표명도 시선을 끌었음. 일본 언론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지만 하토야마 총리는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에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면서 “중국과는 지금까지 이상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함. 이 역시 외교적 ‘수사’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목전에 두고 나온 이 발언을 미국이 알면 기분 좋을 리 없을 것임.
- 하토야마 총리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비서가 정치현금으로 위장한데 대해 사과한 말도 화제가 됐음. 하토야마 총리는 “혜택받은 가정에서 자라는 바람에 자산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부유한 가정에서 돈 문제에 시시콜콜 신경을 쓰지 않고 컸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돈 관리에 부신했다는 변명임.

### ● 한·칠레 정상, FTA심화·발전 합의(11/11)

-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민 방한 중인 미첼 바첼레트 헤리아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함.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5주년을 맞아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FTA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함.
-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지난 1962년 수교 이래 제반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칠레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함. 이에 바첼레트 대통령도 FTA로 다져온 양국관계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함.

- 특히 바첼레트 대통령은 “칠레는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IT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2차 전기 리튬의 세계 1위 생산국”이라며 양국 광업 관련 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대통령은 즉각 양국간 광업 협력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관계부처에 지시함.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의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칠레 학생들의 한국유학 장려를 위해 바첼레트 대통령의 이번 방한 직전 체결된 한·칠레 인적자원 개발교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힘. 아울러 문화협력을 위해 내년도 칠레 독립 200주년 기념사업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칠레가 참가하는 등 양국 상호 관심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이어 바첼레트 대통령은 내년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언급, “한국이 전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하는 주요국의 하나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할 것”이라고 말함.
- 이밖에 바첼레트 대통령은 “편리한 시기에 칠레를 방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이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함.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만찬을 함께 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

#### ● 오바마 亞순방 목표치 낮춰 <WSJ>(11/11)

- 12일부터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순방 국가와의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의 목표치를 낮췄다며 이같이 보도함.
- WSJ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동안 마무리되지 않은 한·미 FTA 문제나 중국과의 기후변화 및 무역 문제, 일본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 등의 현안도 오바마의 순방 이후에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임.
- 특히 백악관 관계자들은 한국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미 FTA 문제에서도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안보 부보좌관은 한·미 FTA에서 미국의 핵심 요구인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수월하게 하는 문제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함.
-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국장도 지난 6일 워싱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FTA가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한다”면서 이런 것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등은 자신의 역량 밖의 문제라고 말함.
-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세계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양국 간의 기후변화 대응에서 합의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프로먼 부보좌관은 “양 정상은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만 말함. 또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상 문제에서도 기록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수단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WSJ는 오바마 대통령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대신 이들 국가와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있어 자신의 언변과 인기도에 의존할 것이라면서 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의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어떤 성과도 없이 미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키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은 비틀 거릴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함.
-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고문은 경제계와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태평양 건너편의 지역과 일련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많은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문제는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아무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함.

#### ● 후진타오, 말聯 방문..경제협정 서명(11/11)

-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11일 철도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경제무역협력협정서에 서명함.
- 중국 신문들은 이날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대표단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함.
- 후 주석은 10일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도착함. 그는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은 양국간 협력과 전략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략적 협력 강화는 양국 국익은 물론 지역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후 주석은 이어 미잔 자이날 아비딘 말레이시아 국왕과 만남. 미잔 국왕은 후 주석에게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후 주석은 11일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무역협력협정서에 서명한 뒤 싱가포르 방문길에 오름.
- 그는 셀라판 라마 나단 싱가포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함. 후 주석의 이번 해외순방에는 부인 류용칭(劉永淸) 여사와 링지화(令計劃) 당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王浩<水+扈>寧) 당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 등이 수행하고 있음.

#### ● 李대통령 “한·加 동반자관계 심화 기대”(11/9)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로런스 캐논 캐나다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내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양국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함.
-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달 6~7일로 예정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간 ‘특별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이어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일괄타결(그랜드바겐)’ 방안 등을 설명하고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함.
- 이에 캐논 장관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G20 정상회의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기를 바란다는 하퍼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함. 이날 접견에는 우리측에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장호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등이, 캐나다 측에서 테드 리프만 주한 캐나다 대사, 필 켈버트 외교부 동아시아국장 등이 각각 배석함.

#### ● 中, 160여개국에 원조..GDP의 0.1%(11/9)

- 중국은 세계 160여개국에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조금은 국내총생산(GDP)의 0.1%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됐음. 중국 상무부 대외원조사(司) 왕스춘(王世春) 사장은 지난 8일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개발도상국의 해양과 해안선관리 포럼’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동구, 남미, 남태평양 지역의 160여개국에 원조를 제공했다고 밝힘.
- 왕스춘 사장은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 무이자 원조, 우대 차관 등 3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들어 인력·자원개발





과 대외교류 부문에 대한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중국은 또 지난 30년간 170여개국의 공무원과 엔지니어를 초청, 각종 시찰 기회를 제공했고 실용 기술 전수, 직업훈련, 교육, 공무원 연수 등도 적극 실시함.

- 왕 사장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외 원조금은 GDP의 0.1%선인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의 GDP는 작년 30조 670억위안(5천100조원)였음.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 10월초 평양 방문때 북한에 무상원조를 제공한데 지난 8일 이집트의 휴양지 샤름 엘-셰이크에서 개막한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향후 3년 간에 걸쳐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오바마 대통령 서면 인터뷰 전문>(연합뉴스, 11/12)

- 다음은 연합뉴스가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서면 인터뷰 전문임.

--취임 후 첫 방한에 대해 말씀 해주십시오.

▲ 나는 아시아와 서울 방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나는 매우 돈독한 실무관계를 쌓아왔으며, 이는 글로벌 이슈,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긴밀한 공조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우려사항입니다. 이 이슈는 이 대통령과 내가 심도 있게 논의해 온 것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다른 주제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comprehensive resolution)’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일치(in full agreement)’를 보고 있으며, (한·미) 두 정부간의 협력도 대단히 긴밀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또 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틀이며, 2005년 9.19 공동성명이야말로 우리가 성취해야만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 협상의 신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6자회담의 일환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뤄질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한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대량살상무기(WMD)와 이의 운반수단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불안정 요인으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74호 결의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이 같은 결의의 조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과 역내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이뤄질 협상은 북한과 역내에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선택입니다.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약속에 따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쪽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를 향해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은 안전과 존경을 향한 평화적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이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부상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경제가 하강국면을 벗어나 현재의 상승궤도에 오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습니다. 나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이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는 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달성한 경제적 성공과 세계의 선진경제 반열에 진입하기 위한 움직임에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여전히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들에 훌륭한 본보기며, 내년 G20 개최는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 리더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이 내년에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동의해 준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미국은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쓰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a4%eb%b0%94%eb%a7%88%20%eb%8c%80%ed%86%b5%eb%a0%b9%20%ec%84%9c%eb%a9%b4%20%ec%9d%b8%ed%84%b0%eb%b7%b0%20%ec%a0%84%eb%ac%b8&contents\\_id=AKR20091113004600071](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8%a4%eb%b0%94%eb%a7%88%20%eb%8c%80%ed%86%b5%eb%a0%b9%20%ec%84%9c%eb%a9%b4%20%ec%9d%b8%ed%84%b0%eb%b7%b0%20%ec%a0%84%eb%ac%b8&contents_id=AKR20091113004600071)>



[참고 2] <APEC정상 특별성명 전문>(연합뉴스, 11/14)

(싱가포르=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등 APEC 21개국 정상들은 15일 오후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연결된 21세기 아·태지역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APEC 정상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특별성명은 균형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등 신(新)성장 패러다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특별성명 전문.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막을 열기 위해 싱가포르에 모였다. 세계경제는 아·태지역을 선두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과 같은 성장” 혹은 “예전과 같은 통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지형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패러다임과 경제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며 지속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그리고 혁신과 지식기반 경제에 의해 지지되는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경을 넘는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흐름과 같이할 수 있도록 경제통합을 향해 보다 폭넓게 접근해 나갈 것이다.

[新성장 패러다임]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G20 협력체제의 목표들을 승인한다. 세계 교역과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APEC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있어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균형 성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APEC 회원국들의 성장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재정, 통화, 무역, 구조개혁 정책들을 APEC 회원국내·외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 궤도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민간 기업, 투자, 혁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실물경제를 보다 잘 운영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관(IFIs) 및 다자개발은행(MDB)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포용적 성장)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경제 활동 기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의 복원력(resilience)을 확보해야 한





다. 포용적 성장은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이는 번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과 금융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재교육, 기능 향상, 국내 인력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의 기초인 교육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나갈 것이다.

#### (지속가능한 성장)

향후 성장은 기후변화를 순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립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UN 기후변화협약의 목적과 조항, 원칙의 틀 내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코펜하겐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무역·투자 장벽을 축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친환경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장벽 도입도 자제할 것이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중기간(中期間)에 걸쳐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필수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공유하고, 보다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APEC 회원국간 검토작업”을 환영한다.

#### [아·태의 연계]

우리는 국경에서의(at the border) 무역 자유화, 국내에서의(behind the border) 비즈니스 환경 개선, 국경을 넘는(across the border) 공급망 연계 제고를 포함하는 21세기형 경제통합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다.

#### (“국경에서의” 자유화)

우리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가능한 창설 방안을 지속 모색(exploring building blocks)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희망하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원산지 자율증명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역내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호주, 캐나다,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의 주도하에 이행될 것이다. 우리는 국경간 서비스 교역 촉진을 위해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에 합의한바, 향후로도 이러한 APEC 서비스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킬 것이다.

#### (“국내에서의” 구조개혁)

규제 장애를 줄여나가기 위한 우리의 구조개혁 노력의 주된 요소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행동계획(EoDB Action Plan)이다. 우리는 역내 비즈니스



가 ①창업, ②신용여건, ③교역, ④계약분쟁, ⑤허가취득 분야에서 직면하는 비용, 시간, 절차의 수를 2015년까지 총 25%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제2차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II)를 통해 2006-2008년간 비즈니스 거래비용을 3.2% 감소시켰으며, 2010년까지 추가로 5%를 더 감소시킬 것이다.

(“국경을 넘는” 연계)

APEC의 공급망 연계 이니셔티브는 아태지역내 공급망에서 8개의 병목점(chokepoints)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재화, 서비스 및 사업자들이 아태지역을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육지, 해상, 공중으로 구성된 다양한 연계교통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chu@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15/0503000000AKR20091115021300001>.  
HTML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